

환자 급감 광주 상급병원, 올해 간호사 채용 안한다

정부, 전공의·의대생 달래기 나섰지만 광주 의료계 정상화는 '아직' 전남대·조선대병원 전공의 복귀 '감감' ... 15일까지 사직 처리 수순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유급 방직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전공의·의대생 달래기에 나섰다. 광주지역 의료계 정상화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의료현장을 떠난 광주상급병원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 광주 상급병원이 의료대란에 따른 환자급감으로 올해 간호사 채용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의정감 등의 불똥이 예비 간호사들에게 튀고 있다.

◇전공의 복귀 '미비' =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대해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15일까지 확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전공의의 사직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10일 지역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미복귀 전공의를 사직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양 대학병원 모두 비복귀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향을 다시 물을 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직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도 지난 2월 말로 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대한수

련병원협의회(협의회)가 회의를 열고 전공의의 사직처리 시점을 2월 29일로 잡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또 정부에 사직확인 시점을 15일에서 22일로 일주일 연장해 줄 것과 사직 후 9월 수련에 나서는 전공의들에 대해 동일 권역에만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의 길을 열었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광주의 한 수련병원 전공의는 "사직서 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복귀시 혜택을 아무리 제시해도 의료계 정상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귀하는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대생 복귀 '감감' =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자 유급을 막을 다양한 학사 운영 대책을 마련했다.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고,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야간·주말·전면 원격수업도 허용하고 추가 학기 개설 시 등록금 무료 조치도 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특례를 보장했으나 학생들의 복귀여부는 미지수다.

학생들이 파업에 나섰던 의대생 증원 문제가 해

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귀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다.

전남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인데 정작 복귀를 장담할 수 없어 답답

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전남대 의대에서는 재학생 707명 가운데 집단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555명에 달한다. 조선대 의대 재학생 총 714명 가운데 600명으로 집계됐다. 일부 입대·유급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미 두 대학 모두 1학기 학사일정이 종료된 상황이어서 기존 학칙대로라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들은 유급 대상이다.

◇예비 간호사 '발 동동' = 광주지역 상급병원이 올해 간호사 임용을 사실상 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지역 상급병원들이 의정감등으로 인해 병원의 환자가 줄고 수술이 감소함에 따라 간호사를 추가로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적자가 쌓이고 있어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도 고려됐다. 더구나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중인 인원만도 327명이다. 조선대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선발해놓고 채용대기 중인 인원이 155명이다.

한 예비 간호사는 "지역 의료계에서 간호사들이 취업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대학병원이지만, 의정감등으로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다"면서 "결국 취업을 위해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이 많은 수도권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애인 보조금 지급관리 허점 악용 수익 가로챈 친모들 항소심도 실행

광주지법, 2명에 징역 4년형

정부의 장애인 보조금 지급관리 허점을 이용해 장애인 자녀들의 보조금 명목으로 수익원을 가로챈 친모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4년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B씨는 징역

1년 2월로 감형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16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11억원 상당의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는 공금자용 단말기와 바우처 카드를 이

용해 수급자용 카드가 결제되면 급여비용을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결국 A씨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인 B씨 등과 공모해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방문 활동을 하는 것처럼 '허위 결제'한 뒤 지자체 지원금을 나눠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증장애인의 자녀들을 장기간 보호·양육하면서 겪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범행에 이른 점이 있지만, 범행 금액, 횡수, 기간 등을 고려 했다"고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추가로 공탁을 했지만 편취한 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점,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B씨의 경우 공탁을했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을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불어난 물살에...광주천 징검다리 건너다 참변

물에 휩쓸려 70대 숨져

장맛비로 불어난 물살에 광주천 징검다리를 건너던 70대가 물에 휩쓸려 숨졌다.

1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광주시 동구 내남동 광주천에서 A(76)씨가 물에 빠졌다. 인근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A씨를 구조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사고 직전 광주천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었으며, 인근 행인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하자 "벗겨진 신발을 찾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광주천은 범람 위험으로 출입이 통제돼 있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광주천에 접근

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씨가 장맛비로 수위가 높아진 광주천 물살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서는 장맛비로 약해진 노후 주택의 벽돌 담장이 무너져 80대 여성 B씨가 흘러 거주 중인 주택 일부분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가 난 주택은 1961년 준공됐고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는 사고 주택 인근의 출입을 통제하고 빈집 소유주에게 복구 공사와 A씨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농협조합장에 뇌물 준 인사청탁자들 징역형 구형

승진 부탁 직원·임시직 부모 4명

농협 조합장 가족에게 승진을 부탁하며 뇌물을 건넨 직원과 임시직 부모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은 10일 광주지법 204호에서 형사10 단독(판사 나상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0)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각 징역 6월~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00~6000만원 추징금 부과도 주문했다.

광주의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근무중인 농협의 조합장의 배우자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현금 6000만원을 든 사과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은 임원 승진을 청탁한 지점장, 자녀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어머니와 아버지 등으로 1000~3000만원을 조합장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합장의 가족이 돈을 모두 반환했고 조합장은 금품 수수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단위 농협은 선출되는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해 조합장 편에 선 이들이 인사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A씨는 조합장 편에 서지 않아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던 차에 저지른 범행이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B조합장에 다른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돈 내놔"...여고생 차량 감금·폭행한 5명 검거

미성년자인 동네 동생과 공모해 여고생을 폭행하고 감금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남부경찰은 10일 특수강도, 공동감금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공범 10대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5월 중순께 광주시 남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고등학생인 B양을 불러내 현금 10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공범 중 한 명을 통해 B양을 불러낸 뒤,

B양을 수차례 때리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양을 A씨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1시간여 동안 광주시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협박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 일면식이 없었지만, 후배들이 'B양이 돈이 많다'고 이야기 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해원 기자 hey1@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